

인 사 말

임태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장 임태희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제1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론회 진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 덕 前장관님, 주제발표를 맡으신 송영대 前차관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실 김근식, 남성욱, 박순성, 제성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올해의 핵심 연구사업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및 평화 문제가 정쟁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남북한 동포 모두가 참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오늘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공개토

론회입니다. 이 자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님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과연 남과 북의 정상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하고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지혜들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한나라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마련한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순서》

【개 회】 오후 2:00 ~ 2:20

- 국민의례
- 인 사 말 : 임태희(여의도연구소 소장)
- 격 려 사 :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토론회】 오후 2:20 ~ 4:00

- 사 회 : 김 덕(前통일부 장관, 성균과대 석좌교수)
- 발 제 : 송영대(前통일부 차관, 숙명여대 겸임교수)
- 토 론 : 김근식(경남대 교수)
남성욱(고려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제성호(중앙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폐 회】 오후 4:00

《목 차》

[발 제]

- 지금,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 송 영 대(숙명여대 겸임교수, 前통일부차관)

[토 론]

- 제2차 남북정상회담 : 쟁점과 전망
 - 김 근 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남북정상회담은 차기정권에서 추진되어야
 - 남 성 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2007 남북정상회담, 한국 보수정치세력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 박 순 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지금,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 제 성 호(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발 제】

지금,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송영대(숙대 겸임교수, 前통일부차관)

1. 머리말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후 꼬리를 물고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는 이제 남북한 제3국 비밀접촉설, 특사교환 임박설로 번지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작년 11월 당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파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동영 전 의장도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적기가 도래했고 3~4월 이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민순 외교부장은 1월 1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연말연시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 교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과 함께 야당의 정보통들도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작년 청와대 386 핵심참모가 제3국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했다. 마무리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상회담에 관한 김정일의 관심과 노무현 정권의 태도, 성사 여부 및 성사時 문제점, 전망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태도

가.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며 올해 통일구호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제시했다. 이것은 북한이 지난해 통일구호로 제시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좀더 구체성을 띄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중시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자는 것이고 평화수호는 남과 북이 미군철수투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족단합이란 남한내 반(反)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해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하자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나라당을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매장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1.4)과 노동신문 사설(1.17) 등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친일경력’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신년사에서 한나라당을 직접 거명해 매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선거 때만 되면 남쪽 정치판이 자기들 안마당이라도 된 양 “누구를 찍어라” “누구는 안된다”고 훈수해 왔다.

한 예로서 북한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 「남조선 동포들에게 고향」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글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 머슴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은 올해 대남전략을 본격적인 선거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한대선개입전략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이 직접 야당후보에 대해 비방·중상하거나 사이버 테러 및 물리적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 남북당국간 대화통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셋째는, 북한이 남한의 친북좌파들과 통일전선을 형성,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게 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신년사 발표이후 남한의 친북성향 단체들은 북한 사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총련은 최근 구체적인 반(反)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리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 대선

은 여(與)와 야(野)의 대결이 아닌 야(野)와 여(與)+북한 합작구도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은 남북간에 합의된 상호 체제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통일이 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어느 일방이 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할 경우 남북간에 큰 혼란과 갈등·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

북한은 2007년 신년사에서 대남정책의 3원칙을 밝히는 가운데 ‘민족중시’와 ‘단합실현’을 유난히 강조했다. 이것은 민족단합, 민족공조를 세분화한 개념으로 그 실천을 위해 올해 초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들은 민족단합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남북정상회담에 나올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신년사 발표 후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남조선 내부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남한 대선에의 개입 의도를 적극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뒷돈도 받지 않고 정상회담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으나 거시

적 안목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김정일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갖는 첫번째 동기는 경제문제 때문이다. 작년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이후 남한의 대북 쌀,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 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의 대북경제제재가 발동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끊기거나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난의 악화로 ‘제2의 고난의 행군’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체제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도 단시일 내에 완화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김정일이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 정권으로부터 쌀, 비료 지원 등 경제지원을 다시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남쪽의 사정은 자기들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갈 경우, 올해 대선에서 우파정권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할 것이다.

우파정권이 들어설 경우 남쪽의 대북정책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나마 이어오던 대북지원에 결정적 변화가 올 것으로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 결과 남쪽의 지원마저 중단되거나 감소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생존을 위해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보급로를 계속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고, 이를 위해서 남한내 반(反)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

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反보수대연합의 한 축으로 김정일·노무현 간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회담의 성사여부는 남측이 북측에 줄 ‘선물’에 달려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을 위해 5억 달러 정도의 ‘면담료’를 김정일에게 지불했다. 또한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000년부터 매년 쌀 40만~50만t과 비료 30만t 이상을 북측으로 보냈다. 이로 미루어 김정일이 이번에도 정상회담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발동 중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현금 대신 쌀, 비료의 대북 지원(쌀 50만t, 비료 35만t의 경우 3,280억원)을 제도화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오래전부터 남한에 요구한 생필품(의복, 신발, 비누 등 8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다.

둘째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5개항 중 1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연방제 통일문제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로서는 2차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좀 더 구체화하여 합의한 다음 이것을 남쪽의 차기 좌파정권에 적용시키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거기에다 북한이 핵을 등에 업고 연방제 ‘틀’ 속에 들어온 남쪽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들 공산이 크다. 그러한 김정일 나름의 대(大)전략이 있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연방제를 향한 하나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총련이 구체적인 반(反)한나라당 투쟁지침을 내리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3.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노무현 정권의 태도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작성한 「2006 남북관계 평가 및 2007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핵 상황이 장기 정체될 때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특사 파견 등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부 보고서는 또 북한과 “참관지 제한 철폐 등 근본문제 협의를 고려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노무현 정권은 금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장소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어디서든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측의

의사에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평양이나 금강산, 개성 등 북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회담의 의제에 관해서는 남측이 핵문제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제시할 것이고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현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특히 핵문제에 관해서는 남측이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나 북측은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피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측이 핵문제 해결에 매달릴 경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는 선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2의 ‘6·15 선언’ 성격을 띤 「한반도 평화선언」(가칭)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선언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북핵문제를 비켜가고 남북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가 없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南으로부터의 쌀, 비료 지원을 제도화하여 정치적 상황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온 쌀 지원방식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李장관은 대북 비료지원 실무업무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 대북 常時 지원의 길을 터놓았다. 이 조치는 2006년 7월 북

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중단된 쌀·비료 지원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인도적 차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지원성격이 인도주의로 포장되면 핵·미사일문제와는 별도로 무조건 북한에 제공될 수 있다. 이는 盧정권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쌀, 비료, 생필품 지원이라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권말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선전함으로써 자기의 실정을 덮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통일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 속에 남기려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선에 크게 반영함으로써 선거를 반전시켜 좌파정권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에서는 선거판도를 「평화세력」對「냉전수구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감으로써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리멸렬한 여권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호재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성사 여부 및 성사時 문제점

가. 성사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노무현정권이 이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김정일이 쥐고 있다. 그

런데 김정일로서는 정상회담의 대가도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때보다 적어보이고 또 임기 10여개월에 지지도 10%미만의 남한 대통령과 만나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생각을 함직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여론은 이런 내용의 개헌을 차기 정권에서 하길 바라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통과될 경우 해당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8년을 재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이 좌파정권으로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남쪽에 들어설 좌파정권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같은 연방국가인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자연스럽게 얻어내고 정치·군사적으로는 핵을 등에 업고 남쪽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무엇보다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북한이 남한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한·미동맹관계가 자연히 무실화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적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은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올해 남한 대선이 남북관계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 성사時 문제점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많은 문제점

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남쪽의 요구는 허공에 대고 지르는 소리에 불과하다. 핵을 체제유지의 기본수단 및 남북관계 주도권 행사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남쪽의 주장은 우이독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틀에서 결정하지,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사태의 돌파구 마련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시간벌기 내지 핵을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회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채택될 경우, 평화로 치장된 알맹이 없는 문서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 문제점은 우리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남쪽이 만약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동의할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을 유발함은 물론 연방제라는 틀 속에서 남한은 북한의 보급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게 종속되는 상황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것은 적화통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셋째로, 우리 대선에 북풍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북한은 남한 대선 정국이 우파 집권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되자 남한의 좌파를 구원할 필요에서 남한내 반(反)보수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남한 대선이 여(與)와 야(野)의 대결이 아닌 야(野)와 여(與)+북한 합작구도로 변질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대선 개입, 북풍을 허용한다는 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천명된 내정불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북풍은 「통일문제의 국내정쟁화」를 유발하게 되고 국론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통일기반을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5. 성사時 파급효과 및 대책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그 시기, 방법, 조건, 의제, 국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북풍이 과연 남북한 정권 책임자들의 뜻대로 남측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총선 사흘 전에 발표했으나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96석을 얻는데 그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 후 햇볕정책의 허상과 북한의 핵실험 등을 지켜보아온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북풍은 효력과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치뤄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기 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은 차기 정권에 부담만 주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개최하되 그 시기는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지난 1월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시기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과반이었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8%였다.

여기서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의 요건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고, 둘째,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하며, 셋째, 뒷돈 거래와 같은 조건이 없는 회답이어야 하고, 넷째,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는 비(非)정략적 회답이어야 하며, 다섯째,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 회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대선개입 책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자기들의 先軍政治가 남한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남한의 정치판을 흔들며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앞치려고 안달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고 대북지원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정상국가라고 하겠는가. 정말 자존심과 체통이 있는 정부라면 북한의 부당한 내정간섭적

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옳았다.

그렇게 하고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경제지원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남한 유권자들이 이제는 북한의 상투적 분탕질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북한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토론-1》

제2차 남북정상회담 : 쟁점과 전망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1.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당위의 영역임

-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라도 개최되는 것이 그 자체로 바람직함

- 조건으로는 6자회담 진전과 북핵문제의 일정한 진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개최의 전제조건일 필요는 없음. 오히려 6자회담이 교착되고 북핵이 위기상황으로 갈 경우도 오히려 핵무기를 명백히 보유한 북한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함

○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북핵 해결의 징검다리론, 남북관계 업그레이드론,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론, 북의 변화 기여론 등을 들 수 있음

- 북핵 해결의 시작이나 종착으로서의 ‘입구론’ 혹은 ‘출구론’이 아닌 북핵 진전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정상회담이 자리매김될 수 있음

것임. ‘9·19 합의’의 이행을 통한 북·미 갈등의 최종 해결은 적잖은 기간을 요구할 것인 바,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폐기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행동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질적 업그레이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그 자체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넘어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와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실상의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구축되었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일정한 역할공간이 확보될 것임. 북·미간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진전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함
-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의지가 과시되고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확인된다면 이는 향후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극적 계기가 될 것임

2. 남북정상회담의 목표

- 2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핵심적으로 북핵 해결과정 진입, 공동번영 위한 남북관계 질적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 등에 맞춰져야 할 것임
 -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정 진입 :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동번영 위한 남북관계 업그레이드 :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교류협력의 남북관계를 넘어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안정화, 정치적 신뢰 구축, 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 및 경제공동체 추진, 인도적 문제 획기적 해결 등에 진전을 가져와야 함
 - 평화체제 구축 기반 마련 :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불가침의사 재확인 및 한반도평화 선언 및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가칭)‘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가동을 맞이하여 남북주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함

3. 추진원칙

- 2차 정상회담의 추진과 개최는 반드시 북핵 6자회담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2차 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회담이지만 반드시

시 북핵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추진되고 개최되어야 함

- 정상회담은 북핵문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상황에서는 그 과정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북핵문제가 교착국면에 빠졌을 때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반드시 정상회담 개최과정은 북핵 6자회담과의 연계된 고려 하에서 진행되어야 함

-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경우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나 진전된 결과가 없을 경우 정상회담의 정당성과 의미는 퇴색하게 되므로 반드시 정상회담은 북핵 6자회담과의 상관성 속에서 그와 관련된 남북의 합의와 성과를 도출해내야 함

-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 없이 일회적으로 회담을 연다면 실익은 없고 신용은 떨어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정책수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이 손해를 보는 식의 zero-sum적 접근이 아니라 남북, 한미, 북미관계가 서로 win-win하는 3차원의 선순환 구조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지금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역으로 한미관계의 발전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상호교환관계(trade-off)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바, 이는 사실 핵 갈등으로 인한 북·미 대결관계로 인한 구조임

-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은 남과 북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미관계도 발전하고 북미관계도 진전되는 3차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이는 2차 정상회담이 남과 북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핵 포기 가시화 등 실질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3중의 긍정 효과를 내야 하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임을 의미함

4. 전략적 고려사항

- 남북정상회담만을 별도로 구상하는 것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혹은 ‘남·북 이후(전후) 북·미, 북·일 정상회담의 순차 개최’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가 증대되며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추진함으로써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베를린 회담 이후 북·미간 논의 진전에 따라 북·미 정상간 만남도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사고할 게 아니라 남·북-북·미 순차 정상회담 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구도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이자 한반도 냉전구조의 마지막 유산인 북·미, 북·일 적대관계를 해결해야만 사실상 한반도 냉전구조의 완전 해체와 동북아 평화구도가 정착될 수 있음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회로, 북·미, 북·일 순차 정상회담을 기획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기여하고 동북아 평화를 증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됨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일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 표명 유도하도록 해야 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의 ‘입’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우회적 언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와 경제적 효율성이다”는 내용의 언급이면 충분히 의미가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파급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됨

-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과정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

5. 시 기

- 금년의 대선이라는 국내정치적 변수와 민감한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충분히 당위성을 갖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자체부터 포기한다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임. 정상회담 추진의 당위성이 있다면 이를 추진하되 다만 국내정치적 활용을 차단하고 정략적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해야지 이를 핑계로 추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됨
- 가능한 조건이라면 금년 상반기가 바람직하며, 하반기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대선 본격화로 인해 국내 정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임
- 대선국면에서의 영향력과 정치 판도의 요동을 우려해 정상회담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북핵문제는 여전히 중대하고 절박한 안보사안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비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자 업무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의지와 노력의 하나로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 그것이 국내정치에 미칠 파장이나 정부 여당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는 정상회담을 실제 추진하고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그 우려를 최소화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있지도 않은 부작용과 우려를 내세워 정상회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함

6. 의 제

- 정상회담이 열리면 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함
 - 다만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로는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 정상간 합의가 들어가야 하고, 1차 정상
회담에서 빠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기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진전된 합의사항 도출이 바람직

7. 실제 성사 가능성과 북한의 선택

- 정상회담은 결국 ‘정상’이 하는 것인 바, 남측의 정상은 아직 정상
회담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추진동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고 아울러 북측 정상 역시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노무
현 정부에 대한 신뢰약화 등으로 인해 특별한 노력과 계기가 없는
한 정상회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우선은 북핵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중단된 남북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대북 노력을 해나가되, 관계 복원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주도력이 증대될 경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가능성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토론-2》

南北頂上會談은 차기 정권에서 추진되어야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있을까?

○ 개최 시나리오

- 정부는 2007년 대선을 “전쟁 불가피론과 평화담론” “미래지향적인 자주와 수구지향적인 종속”의 이슈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 10%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노정부로서는 경제 등 일반 이슈를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하반기 들어 정부 각 기관과 정치인이 북한에 5차례에 걸쳐 정상회담 개최를 평양에 제의함

○ 실패 시나리오

- 남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임기 만료가 가까워 레임덕에 시달리는盧정권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얻어낼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 하에 회담에 소극적인 입장임

- 특히 과거와 같이 현금(5억불)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대가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서 수용할 수 없어 실현성이 없다는 판단임

○ 개최 전망 검토

- 김정일은 현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차원에서는 얻어낼 것이 없지만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여당 지원 등 선거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음
- 특히 이 과정에서 여당의 차기후보와 정부, 김정일간 합의로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대규모 퍼주기 합의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군병력 감축 공약 제시 등의 밀약을 합의할 경우, 김정일 입장에서도 정상회담 수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특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 작은 진전만 있더라도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는 명분하에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25)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핵 문제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게 없다”

- 정동영 전의장은 “내년(2007) 3-4월이 적기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김위원장으로서도 이 시기를 놓치면 고립구도 속에 놓이게 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에서 모든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음

○ 김정일 및 북한당국의 반응

- 지난해 12월 27일 북한 중앙당 회의에서 “특사접촉 등 실무적 차원에서 정상회담 문제를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선 회담으로 득 될게 크게 없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말라, 목마른 놈들이 샘 파게 더 나뉘라” 라고 언급
-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反보수대연합 주장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화재개 등 대남 유화전술을 구사하여 남남갈등을 시도
- 2007. 1.7~23 4차례의 연이은 성명과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남측에 촉구
 - 노두칠 부총리(1.21) “북남 협력 사업이 중단된 것은 불미스러운 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김완수 서기국장(1.23)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빨리 나오라”
 - 1. 24. 이재정 통일부장관 등 100여명 7개월만에 개성시내 방문
- 핵동결을 통한 미국과의 긴장완화 → 남북관계 회복 → 대북지원 재개 → 경제실리 획득

- ※ 북측은 남북관계 교착이 계속될 경우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을 경계하고 유화공세 전술을 전개

2. 정상회담 일정과 파급효과: 微風인가 토네이도인가?

○ 추진시기

- 북·미간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 진전(1.17-18 베를린 회담, 1.30 BDA 실무논의, 2월 8일경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정세와 남한내 대권주자 동향 등 국내정세에 상당부분 의존

- ※ 부시 대통령, 북미 양자 접촉을 허용, 미국은 베를린 북·미 회담에서 BDA 금융제재 부분해제 (1,300만 달러선) 언질

- 예상 시나리오

- ⇒ 남북관계 대화 재개 (식량 비료 지원 회담 2월)
- ⇒ 남북한 특사 교환 방문 (2개월 전, 예상 2-3월)
- ⇒ 정상회담 발표 (1개월 전, 4-5월, 실제 개최 6-8월)

- ※ 8월 15일 광복절을 넘기면 북한의 반대와 우리내부의 추동력 상실로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 불가 예상

○ 파급효과 분석

- 정상회담의 효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풍의 차원을 넘어 정국상황을

반전시키는 토네이도에 해당할 정도의 영향력 보유 판단

※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그 성과를 활용할 여권주자의 부재 및 2000년 회담의 학습효과 등으로 현재 대선 지형을 바꿀 파괴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분석을 함

- 그러나 정상회담은 방송의 힘을 통해 정국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노정권의 지지율을 현재 10%대에서 30%대로 반등시키는 후속조치를 가동케 할 수 있는 뇌관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음

- 정상회담은 19세로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주제가 부상함에 따라 기존 정부의 실정을 망각하고 올인하는 편승(Band Wago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정상회담은 여타 현안으로 인화되는 휘발성이 강하고 콘텐츠가 풍부한데 반해, 개헌은 길어야 2~3주일에 그치는 경량급 이슈임

- 반면 정상회담은 특사예비접촉에서 본회담, 및 사후 후속조치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언론 헤드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중량급 주제로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음

※ 김대중 前대통령은 포용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정상회담이 정국의 화두로 부상되면서 여권의 행동통일 가속화

-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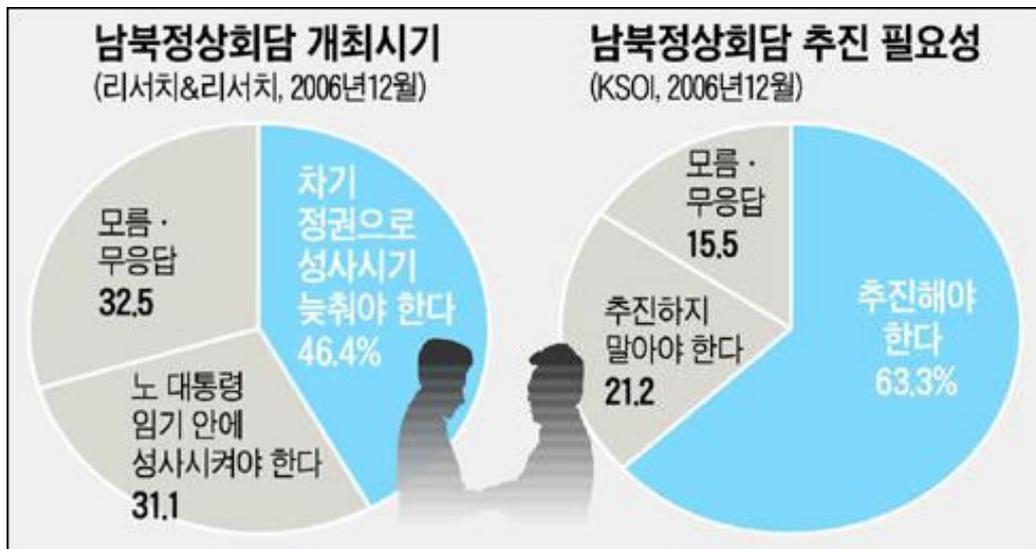
- 여당,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평가가 대조적이어서 성사만 된다면 국민 여론에 큰 변화가 있을 것”
-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합의”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에 나올 경우 모든 여타 이슈는 침몰될 수밖에 없고 여타 후속적인 공약과 장미빛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
 - ※ 남북한 감군 합의에 따라 군부대 감군, DMZ 평화적 이용, 남북한 학생 교류, 통일교육 강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핵 등 남북문제는 현재는 대선 5대 이슈에 머물러 있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부동산 등 경제문제와 더불어 2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현재 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국가는 美國, 미국은 정상회담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은 대선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남북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전면에서 부상하는 것은 여당의 ‘전쟁과 평화’, ‘자주와 종속’, ‘친미와 반미’ 등의 이분법 논리에 의하여 여당의 선전선동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큼
- 남북문제는 국민들의 내재된 민족주의 관념을 자극하여 여당에 의해 야당을 역공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전면에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함

3. 정상회담은 왜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하는가?

- 정상회담이란 대통령이 구사하는 고도의 통지행위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회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여건, 시기, 의제 등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국제제재가 가해지는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오히려 한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음
- 북핵을 다루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약화와 국내정치에 혼란만을 가져올 정치적 책략에 불과함.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포기 행보를 잘게 썰어 미국의 반대급부를 극대화시키는 살라미(salami) 전술을 구사할 것임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써 먹을 만한 카드가 결코 아님. 북한은 워싱턴과의 게임에 올인할 수밖에 없음.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포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를 겨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북풍의 차원을 넘어 정국상황을 반전시키는 토네이도의 영향력을 보유할 것임
- 대통령의 임기가 10여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사가 명확한 주제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간에 이견이 심한 주제에 대해 합의하면 그 부담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짊어질 수밖에 없음

- 결국 정부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차기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수용하여야 함



※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개헌과 유사함@

《토론-3》

2007 남북정상회담, 한국 보수정치세력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 2007년 북·미 관계의 전망

-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그에 대응한 미국 중심의 유엔 대북경제제재 추진 등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는 듯했으나, 5차 6자회담 이후 북·미 양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위기국면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임
- 북·미 관계의 안정화는 미국 내부의 여론·정세 변화 및 부시 행정부의 대외협상력 저하, 그리고 북한의 체제안정 추구 및 경제적 개혁·개방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와 관련하여 북·미 사이에 일차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한과 미국·중국은 북·미 수교 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임
- 이런 점에서 2007년은 북·미 관계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상황에서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뮤티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기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음

2. 남북정상회담의 기능과 성격

-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남북간 정치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에 진전시킬 것임
- 197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모든 정권은 정상회담 개최를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고려에는 체제경쟁에서의 성공에 바탕을 둔 북한 포용과 남북협력이라는 정책기조가 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1970년대 초반의 고위급 비밀접촉, 또는 1994년의 정상회담 시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국면에서, 또는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민족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음
- 정상회담의 이러한 기능·성격을 고려할 때, 어느 정권이라도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거나 한반도 위기국면을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 이러한 특징은 남·북 사이에서뿐 아니라 보통국가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권력이 최고지도부에 집중된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남한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통

일의 문제도 남북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최근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책적 유용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임

3. 2007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 2007년에는 북·미 갈등이 안정화되면서 해결을 향한 기초를 닦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북·미 갈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이 지난 시기의 관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남북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최고위급 협상이 필요함
-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만일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미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4. 한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

- 북한과 미국은 한국 대선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함
- 북한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여 ‘반보수투쟁’ 또는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에 대항한 반보수대연합’을 강조하고 있음(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 ※ “올해 남조선에서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렬이냐를 가름하는 첨예한 대결장으로 된다.” 공화국 정당·정부·단체 연합성명(2007.1.17)
- 미국은 2002년 경험을 고려하여 한국 대선국면에서 반미/친미 또는 평화/전쟁의 정치적 균열선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전작권 이양 및 주한미군 이전 또는 북·미 갈등과 관련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음
-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대선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국민의 현명한 선택과 대선후보 간 정책경쟁을 방해하고 대선 이후 국민통합을 어렵게 만들 것임
- 남한 정치사회는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개입 가능성에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의 전망과 정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국민들의 최고 정치행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미국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는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민족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정상회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

5.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

- 북한과 미국이 양자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나 남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나 가능성은 낮음

- 만일 남북한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는
 - 북·미 협상이 완전 실패로 끝나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거나
 - 북·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에 합의한 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 경험 및 경제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일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와 여·야는 정상회담의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대선 국면 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정쟁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들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대선 이후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야 모두 북한의 대선개입전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자신들이 당파적이지 않으며 민족·국가의 이해관계를 중시하

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에게 심어주어야 함

- 시기적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3-5월경 전면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순수한 ‘정쟁의 요소’로서만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6.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쟁점

- 남북정상회담이 민족·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건이라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여·야간 높은 정치적 타협과 신뢰 위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 모두 타격을 입을 것임
 -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나치게 당파적이거나 선거용으로 전락한다면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질 것임
-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협력 심화임
 -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한반도 경

체권 형성과 관련하여 획기적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북·미간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국면을 안정화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남북이 당사자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하지만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나 혹은 개최된 이후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여야의 완전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선국면 하에서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1997년 말 외환위기상황에서 대선후보자들이 한국정부와 IMF 사이의 협상에 동의한 경우는 참조할 만함

-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 남북관계 및 민족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는 정책역량을 보여주어야 함

- 한나라당이 민주적 의회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상실한 시기 동안 보여준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정체성을 벗어나, 민주적 타협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할 때에만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임@

《토론-4》

“지금,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가?”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1.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며, 지금이 適期인가?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
 -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추진의무 명시

-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필요
 - 단, 대화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

- ‘일반적 당위론’으로 말하면, 남북관계 관리 혹은 그의 개선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모든 정상회담이 언제나 추구할 가치가 있는 ‘절대 善’은 아니며, 불필요한 남북정상회담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음

 - ※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상회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치적쌓기에만 집착하는 회

담, 과도한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측에 잘못된 메시지만 전달하는 회담, 만남 그 자체를 위한 회담, 안보 불감증 확산 등 남북관계의 안정을 훼손시키는 회담 등은 bad summit meeting에 해당

○ 그러나 현재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면이 존재

- 순수성 : 추진의도가 불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재창출, 인기만회용 등 ‘정략적 이용’의 가능성 다분하며, 북한은 대북 퍼주기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할 가능성 다대
- 필요성 :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의 기여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북핵 관련 한·미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
- 가능성 : 정치적·시기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10% 이하로 떨어진 노무현 정권의 말기 정상회담 추동력 상실 혹은 대폭 약화, 2000.6 제1차 정상회담 때처럼 ‘대북 뒷돈(김정일 비자금)’ 제공은 법적·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경제침체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 팽배, “노무현이 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는 의식 확산, 이 밖에 북핵문제 등 국내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여건은 최악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 허·실 진단

○ ‘상황론’으로 말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현 정부 말기에 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의지 :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의지 혹은 그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함

※ 그동안 총리, 여당 의장, 통일부 장관 등이 돌아가면서 정상회담 개최 의지 피력. 일본 언론은 작년 상반기 비밀추진설 제기

- 북한의 입장 : 한나라당의 집권에 따른 햇볕정책(무조건적 포용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주무르기 쉬운 대상이 정권을 계속 담당하는 것을 희망. 이 밖에도 대규모 대북 지원 등 남북정상회담 수요를 느끼고 있음

※ 2007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의지 표명

○ 남북한이 모두 정략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정상회담의 개최는 기대 난망

○ 2000년 6월 경우와는 달리 이번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

- 북핵 딜레마 : 최우선의 회담의제는 북핵인데, 북핵은 북한이 남측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기본입장

※ 이와 관련, “우리는 핵을 포기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는 강석주 발언도 주목 필요

- 북한 핵실험 등 안보적 위기 상황으로 선부른 평화선언 채택은 오히려 국내적으로 역풍 가능성 다대
 -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북한이 만족스러워 할 정도의 대북지원 카드도 부재
 - 2000년 6월과 달리 정치권 및 국민의 지지가 극도로 미약한 상태
- 그에 비해 남북정상회담은 남남갈등, 여야갈등, 한·미 갈등 야기 등 정치적 부담 요인이 존재
- 정상회담 카드가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부재하며, 오히려 역효과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 ※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선례

3. 예상되는 agenda 및 대책

가. 예상되는 agenda

- 북핵문제
- 통일방안의 협의, 실천문제

- 한반도 평화정착문제 : 부시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 관련 발언의 실천문제
- 인도적 사안 :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문제, 이산가족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등
 - 대북 쌀지원 지원은 공식적인 의제화보다는 비공식 거론 및 구두 합의 가능성
- 남북협력문제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확대문제 등

나. 바람직한 대책방향

-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정리
 - 북한의 전향적 조치 촉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 유도
 -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계좌동결 부분 해제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동결 및 IAEA 사찰 우선 실시 추진: 이후 단계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포괄적인 해결 모색
- 통일방안 협의문제는 헌법과 국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한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임

-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으로 근본 뿌리(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사회주의 체제가치에 기초)가 다른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 섞어찌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
- 북핵 상황 하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제도적 평화’ 집착보다는 ‘실질적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
- 비무장지대와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관리와 위기관리방안 협의 도출
- 비무장지대에서의 시범적 군비통제와 검증 실시를 비롯하여 무력 불가침에 대한 실천적 조치의 협의 도출 적극 추진이 바람직
- 이밖에도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 전환 및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합의가 채택될 경우 그 세부실천(특히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의 협의·추진)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 균형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요망됨
- 비전향장기수 63명 무조건 송환 후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사실상 없음

-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근원적 해결을 모색 : 별도의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 인도적 관점은 물론 통일의 접근시각에서 볼 때에도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문제제기)하고 해결을 추구할 것임을 밝혀야 할 것
- 북핵문제 해결 이전까지 남북교류협력의 대폭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득해야 할 것임
- 대북 화해·협력의 속도 조절 불가피론 제시

4.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안보적 파급영향

-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핵 상황 하에서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부정적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남남갈등 : 이념 대립 격화, 친북좌익 내지 김정일 추종세력의 발언권 강화 예상,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보혁 갈등이 발생할 소지 다대
 - 한·미 갈등 : 북핵 공조 약화에 따른 한미간의 미묘한 신경전 야기 가능성

- ‘新 북풍문제’ : 통일 대 반통일의 구도,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대결을 부추기고 이를 대선국면으로 연결시키려 할 가능성(여기에 여권도 편승할 것으로 예상) 존재. 이 밖에도 북한의 대남 정치선전 및 다양한 정치공작에 이용될 가능성 불배제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정착 착시현상’을 연결시킬 경우 일반 국민들은 이에 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평화와 전쟁 구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대량 발사 등 극도의 긴장조성 후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극적인 타결을 이룩할 경우 그와 같은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에 유의 필요

-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혹은 여권 대선 주자의 대북 밀사 활용으로 대선 후보의 주가(정상회담 스타 발굴 및 ‘평화의 사도’역 연출)를 최대로 올리려 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관련, 2002년 6.29 서해교전(위기 고조) → 남북비밀접촉(남북장관급회담 중단 상황) →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 → 남북화해·협력 극적 연출+ (효순·미선이 사건 활용) 친미와 반미 구도 형성 → 대선 승리로 연결한 사례를 검토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

○ 남북정상회담의 정치공작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반복,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정치공작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없으면서 개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임
- 이 같은 반국가적인 범죄이자 반민족적인 재앙조성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수사, 처벌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긴급함

5. 한나라당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노무현 정부가 무조건적 화해·협력 지상주의 혹은 정권 차원의 치적쌓기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이와 차별되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평화통일의 기반조성 : 전쟁방지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및 민주화
 -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추진 : 자유와 인권의 대북 확산,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 자유민주의 통일국가 미래상 분명히 천명

- 투명성(공개성)과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 철저한 비밀주의 혹은 밀실회담 반대, 반대파 참여 불배제, 국회 동의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교류·협력 실시 : 대화·교류·협력은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원칙과 질서에 입각한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체제변화에 기여토록 노력
- 상호주의 실천 : 기계적 상호주의 대신 ‘형평적’ 상호주의 혹은 ‘전략적’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 안정적 남북관계 정착

○ 이러한 원칙과 기조에 따를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도 무방

-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이벤트성 ‘깜짝쇼’ 방식을 지양하고, 충분한 실무적 토의를 거쳐 추진하는 생산성 있는 회담방식을 채택

○ 한나라당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뿌리내리는 한편, 다방면의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의 대북정책 추진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운영 및 한반도 통일 실현의 방책과 수단

※ 대북정책 : 남북대화 및 평화외교(분단질서관리외교), 교류협력 등을 수단으로 한반도 평화관리에 주안점

※ 통일정책 : 평화적 통일 지향하며 통일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협상에 의한 통일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라 접근, 평화적 흡수통일방식도 불배제하며 이에 철저한 대비책(한반도 급변사태 및 위기관리 방안) 강구

※ 무력남침 대비책 : 남침을 통일의 기회로 연결시킴. 응전자유화 대책(한·미 연합사 활용)과 비상적 통일외교 작동

○ 대북, 통일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 목 표 : 단기목표는 '한민족공동체'(한반도 안보·경제공동체) 실현, 장기목표는 남북한의 체제통일
- 지향가치 : '평화'와 '인권'(화해, 협력, 지원이 아님), 인권개선은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양자간에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긴급
- 우선순위 :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성원의 인권 보장(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

※ 대북정책에 '인권'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상위개념으로 자리매김토록 함@